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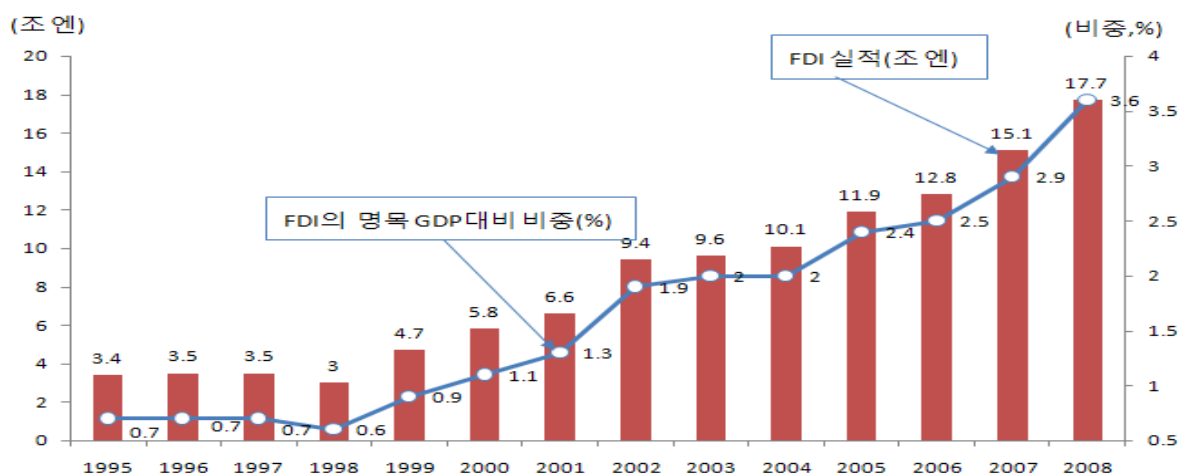
일본 정부의 FDI 우대정책 강화 배경

2009년 일본의 FDI 실적은 글로벌 경제위기 영향으로 50% 이상 급감함. 이에 일본 정부는 FDI 확대를 위한 세제우대 및 입국수속 절차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하는 우대정책을 6월 경에 발표할 방침임.

□ 일본의 GDP 대비 FDI 비중은 우리나라보다 낮음

- 2008년도 일본의 FDI 실적은 17.7조 엔으로 GDP대비 비중이 3.6%를 기록함.
- 일본의 GDP 대비 FDI 비중은 미국(15.8%), 영국(46.5%), 한국(10.5%)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임.

〈그림〉 일본의 FDI 실적 및 GDP 대비 비중 추이



자료: 재무성, 내각부 통계자료를 참조로 작성

- 2009년도 일본의 FDI 실적은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51.8%나 감소하였음.
- 2009년에 P&G가 아시아 총괄본사를 고베에서 싱가포르로, 노키아도 연구개발거점을 도쿄에서 싱가포르로 이전하는 등 미국기업의 대일 투자규모가 전년대비 85.7%나 급감함.
- 일본경제신문은 일본에 비하여 아시아 국가들이 최근 FDI 우대정책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자국에 대한 FDI가 급감하고 있다고 지적함.
- 한편, 벤치마킹의 사례로서 우리나라의 외국인기술자 대상 소득세 감면(2년간 50%), 비자심사 기간 단축(1주일)과, 싱가포르의 협상에 의한 외자기업 법인세율 결정을 언급함.
- 일본경제신문은 FDI 확대가 자민당 정권시대부터 일본 정부의 정책과제로 대두되어 왔지만 지금까지 실효성이 거의 없었다고 평가하며, 근본적인 제도개혁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강조함.

□ 일본 정부, 세제감면과 입국절차 간소화를 중심으로 FDI 우대정책 논의를 본격화

- 경제산업성은 FDI 확대를 위해 세제우대 및 입국수속 간소화 등을 검토 중이며, 6월로 예정된 신성장전략 발표에 이를 포함할 것으로 보임.
- 특히, 일본 정부는 아시아총괄본부 및 연구개발거점을 적극 유치하여 GDP 대비 FDI 비중을 2008년 3.6%에서 향후 10%대로 끌어

어울린다는 목표를 제시할 계획임.

- 세제와 관련해서는 투자금액, 투자분야, 신규고용 창출규모 등을 감안하여 법인세·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제도를 논의 중에 있음. 단, 일련의 우대제도는 신규 투자에 한정함.
- 경제산업성은 현재 외국인기술자를 대상으로 비자심사 등 입국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관련부서와 의견 조율 중임.
- 이외에도 투자상담과 우대정책 협의를 일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창구(One-stop Service Center)를 설치하는 방안과 FDI 관련 법안의 개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.
- 그렇지만 일본경제신문은 일본시장의 매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인세율의 일률적 인하, 항만·항공 등 물류기반 정비, FDI 관련 규제개선 등의 장기 전략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함.

<참고자료>

日本經濟新聞(2010.4.22). 「對內直接投資へ外資優遇」.

經濟同友会(2009. 6). 『對內直接投資推進委員会活動報告』.